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1(24-7) | 2024. 7. 1

러·하마스의 하이브리드전과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김성진

대한민국을 지킨 6·25전쟁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이성춘

제대군인의 안정적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최규상

러하마스의 하이브리드전과 북한의 회색지대(Gray Zone) 도발

김 성 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22년 2월 시작된 러-우 전쟁, 2023년 10월 시작된 이-하 전쟁이 좀처럼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고, 각국도생(各國圖生) 기조와 진영논리만 굳어졌다. 특히 러-우 전쟁의 경우, 대다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습 침공에 곧바로 굴복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어려운 여건에도 선전(善戰)을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회색지대 분쟁(Gray Zone Conflict), 하이브리드戰의 대표 주자로 선전·선동전략의 대가다. 조지아 침공(2008), 크림반도 강제 합병(돈바스 전쟁, 2014), 러-우 전쟁(2022)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4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에 수많은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이용했으며, 크림반도가 구소련시절 흐루쇼프 서기장의 독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넘어갔다는 선전·선동 전술 및 심리·여론전 등을 사용했다. 특히 특수부대 및 현지 저항세력으로

위장한 군대를 투입하고, 정보작전(IO)과 사이버 공격, 선전·선동 전술 등 ‘비전통적 기법’을 융·복합적으로 응용했다. 이들은 회색지대 전략과 하이브리드戰으로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며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사회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에 위기를 인식 및 대처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다. 러-우 전쟁에서 미국은 평화적 결말을 기대하기에 경제제재 및 정치·외교적 협상 위주로 대처하고 있다. 러시아는 감정을 앞세워 군사력을 강압·공세적으로 사용하며, 국제사회를 핵무기로 위협한다. 우크라이나는 당장의 영토 보존(保存)과 주권 확립이 위중(危重)하기에 국가 동원령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방식은 네 가지다. 첫째,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여 ‘상대의 결심을 지체시키고, 파멸(Destruction)’을 조장한다. 둘째, 비군사·군사적 비율을 4대 1로 하되, 외교·정치·경제적 수단 등을 통해 식별된 인프라의 허점 및 취약점을 활용하여 내부 혼란을 부추긴다. 셋째, ‘공식적인 전쟁 선포’는 하지 않고, 통일된 패턴은 없으며, 융·복합적으로 응용한다. 넷째,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전선(戰線)을 구축하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강력한 공세로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시키면서 국민적 불안과 공포심은 최대한 높였다.

이러한 러시아에 세계군사력 22위인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음은 DIME 요소를 통해 알 수 있다. ①(Diplomacy) 정부·군·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냈고, 지원하는 분위기로 바꿨다. ②(Information) 일반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러시아의 불법 전투 행동을 실시간 촬영 및 전파했고, 국제사회가 공분을 일으키며 연계·협업으로 발전되었다. 결국, 러시아는 고립되었고, 전쟁지도부-전선사령부 간 소통은 한동안 제한되었다. ③(Military) 구소련 세력권인 발트 3국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친러정권이 들어설 경우, 러시아의 서진(西進) 가능성에 위기감이 작용했다. 결국, NATO·EU는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④(Economy) 영국의 경제회복센터(CER)에 따르면, 러시아의 하루 전쟁 소요 비용은 24조 원으로 경제적 부담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NATO 가입을 포기하면, 휴전 하겠다”고 하는 언급도 이에 따른 연장선의 하나로 읽힌다.

2023년 10월 중동지역에서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네 가지 방식을 채택했다.

첫째, 6·25전쟁, 제4차 중동전쟁(욘 키푸르 전쟁) 때 침공한 날짜와 같이 공휴일(안식일)을 선택했다. 둘째, 불도저와 재래식 폭발물, 고압 물대포, 패러글라이더 등을 이용하여 국경지대(Bar Lev Line)를 단 2시간 만에 돌파했다. 셋째, 아이언돔 10개 포대는 공중요격(최대 800발)이 가능했으나, 20여 분 동안 5,000여 발을 발사

하여 대응하는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넷째, 기만·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을 통해 기존의 사이버·심리·여론전에도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려 내부 불만을 조장했고, 정국(政局)을 혼란하게 하면서 취약한 틈새를 공략했다.

북한이 회색지대(Gray Zone) 분쟁과 하이브리드戰을 반복함은 러·하마스의 수행 방식과 유사하다. 첫째, ‘무인기 침투(2014~)’, ‘오물풍선 살포’, ‘공세적 블리핑(Bluffing)’ 등으로 우리 국민이 반응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비행 가능 거리를 측정하며, 정부·군의 대응 방식을 학습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둘째, ‘법원 전산망 해킹(2024)’ 등과 서해 해상분계선(NLL) 일대의 ‘GPS 교란 공격’으로 정부·군의 대응 수준 및 허용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탄도·순항미사일을 반복 발사함으로써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안보 불감증을 더 무디어지게 한다. 넷째, 북-러-중은 필요에 따라 전략적 연대·군사 협력을 강화하여 Family-Ship이 두텁게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중-북의 관계엔 다른 변화가 느껴지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항시 ‘한반도 통제 또는 특정 지역 점령’을 통해 적화목표를 달성하고자 갖은 책동을 벌인다. 군사·비군사 수단을 이용하여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도 공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봐서다. 김정은의 회색지대 분쟁과 ‘살라미 전술’의 이면엔 공작(工作-Maneuver)과 전복(顛覆-Subversive)을 통해 정치·사회·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작전의 중심(重心-Center Of Gravity)’을 ‘일반 국민’에 두고 있다.

러시아가 하이브리드戰에 성공한 요인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역사·문화권이라는 공통점과 쉽게 내부로 침투할 수 있어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선전하는 유인(誘因)은 개전 초기 정부·국민·군이 한마음으로 결집하고, 내부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유형의 국가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 및 극복할 의지가 없다면, 강한 국방력과 끈끈한 동맹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우리의 정치·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가뜩이나 무디어진 안보의식을 더 무디게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더구나 군의 “즉·강·끝” 원칙은 행동 강령이어야지 정치적 수사(Rhetoric)가 돼선 안 된다. 정부·군·국민이 한마음으로 결속하여 북한의 제2·제3의 도발에 대처할 때다.

대한민국을 지킨 6·25전쟁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이 성 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북한학 박사)

매년 6월이 되면 어김없이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63년이다. 그전 1961년 7월 5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되새기며 예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군사원호청’이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6·25전쟁에서 희생된 분들과 상이군인을 돕기 위해 6월을 ‘군경원호강조기간’으로 정하였다. 이후 행사 명칭이나 기간에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 1985년부터 오늘날과 같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들에 대한 감사함을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후손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당위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 차원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공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로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확립된 유학사상은 지난 2,5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면서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상, 문화 등 다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이 대세인 현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바로 기록의 보존과 교육이라는 핵심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생명으로 지켜낸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와 기념행사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국내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6·25전쟁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은 이제 후손들의 몫이 되었다.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과거는 현재의 근거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 이러한 대명제 아래 새로운 방안 중 하나인 6·25전쟁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시키는 방법이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 MOW)’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의 진정한 기본 목적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세부적인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

산을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존토록 보장하고 국가 및 지역수준의 중요한 기록유산의 보존을 장려하면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평등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기록유산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기타 자료들을 발전시키고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면서 중요한 기록유산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치들이 널리 내재된 문화유산을 통해 인간은 인류의 영속성을 확인하게 되고, 보다 더 큰 범위에서 인류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재되어 있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등재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간략하게 등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국가 유산청에 등재신청서를 접수하여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가 유산청에서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로부터 본격적인 등재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어 전문가 조사 및 평가단계를 거쳐 권고안이 채택되면 국제자문위원회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다음으로 자문위원회의 검토 후 합의안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등재 목록을 발표하게 되는 최종 절차를 거친다. 총 6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요 기간은 2년 정도이다. 공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재되어 있다. 보통 등재 신청에서부터 등재가 완료되기까지는 5~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정신으로 확실하게 등재하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칭 “한국전쟁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위원회” 조직 후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6·25전쟁 관련 기록물의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면서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당위성의 대전제 아래 지속적으로 6·25전쟁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젊은 학문후속세대들에게 6·25전쟁을 통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논어 학이(學而) 편에 “군자무본(君子務本),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구절이 있다. 군자(君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道)가 생길 것이다. 이는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기본은 출발 지점이기도 하지만 회귀할 지점이기도 하다. 기본 없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경계한 대표적인 말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6·25전쟁을 기억하는 가장 기본은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진실을 널리 알려 모든 국가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각국의 세계기록유산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가슴속에 뭉클함을 느끼면서 6·25전쟁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제대군인의 안정적 재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최 규 상

(국방AI사업팀장)

(한국건설경영기술원 건설경영연구본부장)

제대군인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사회적 책임이자 의무이다. 특히, 군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은 제대군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일 것이다. 제대군인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 및 복지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제대군인의 취업 및 복지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은 제대군인 뿐만 아니라 현역으로 근무하는 군 장병들에게도 매우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다. 특히, 군복무 기간 동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복귀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군복무 기간 동안 획득한 기술과 경험이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도 크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30% 이상이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고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의 경우, 일자리 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아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한 실질적인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재정적 지원도 단기적이고 한정적 이어서 지속적인 자립을 돕기에는 부족하다.

동맹국의 경우,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GI Bill'이나 영국의 'Career Transition Partnership' 프로그램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교육 기회 제공, 취업 알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제대군인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GI Bill'은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학비를 지원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영국의 'Career Transition Partnership'은 제대군인들의 기술과 경험을 민간 부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대군인과 기업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군에서 제대하는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술 인증 및 자격 제도 강화이다. 군복무 중 획득한 기술과 경험을 민간 분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증 및 자격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취득한 자격증과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이다. 제대군인의 다양한 직업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특화된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제대군인의 개인적인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훈련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멘토링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제대군인 출신의 멘토를 양성하여 지원하며, 제대군인 멘토와 제대군인과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 상담관에 의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대군인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업 인센티브 제공이다.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제대군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제대군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군산상생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위에서 제안한 정책의 도입을 통해 제대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대 후에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제대군인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와 취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